

지방시대 실질 분권 긴밀히 협력

전북연구원, 강원·세종연구원 등과 분권협력 '맞춤형' '특별자치도 분권포럼' 열고 성과·방향성 등 공유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2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과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 성과와 경험, 방향성을 공유하는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세종·전북·제주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하고, 지방시대 실질적 분권을 위한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해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의 결성 및 순회 개최, 현안 공유, 공동연구 기획, 상호협력 분야 발굴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북·강원·세종·제주의 분권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한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우 명예교수(이하에)의 '특별자치도의 입법방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특례 제고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방향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양덕순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분권 사례, 특별자치도 추진 경험과 성과, 추진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과



전북연구원은 12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 성과와 경험, 방향성을 공유하는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개최했다.

연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은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의 사례를 참조해 전북의 시

행차도를 최대한 줄이고, 실행 시제역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북에 실익이 높은 특례를 반영시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尹 부부, 16개 시·도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30만원씩 총 480만원 기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며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를 한 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받은 답례품은 다시 서울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다.



눈물바다된 공청회장

이종철 이태원 참가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생존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종철 이태원 참가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생존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종철 이태원 참가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생존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쌍방울 전 회장, 이르면 13~14일 귀국

쌍방울그룹 측 "불법체류 신분 인정, 자진 귀국 의사"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오는 13~14일 국내로 들어올 전망이다.

12일 쌍방울그룹 측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태국 현지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불법체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뒤늦게 입장을 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측 조치로 무효화 된 여권에 대한 긴급 발급 절차를 밟아 이르면 13일 태국에서 출발할 전망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해의 도피로 인해서 계속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버티는 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에 태국 빠롬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친권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에 달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다. 그는 우선 2018~2019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뉴스1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만들기" 민주, 산업재해예방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관련 활동을 집중하는 원내 대책기구를 가동했다.

12일 민주당은 당 내 산업재해예방 TF 출범식을 진행했다. TF 단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의원이 맡았다.

TF 소속 의원단은 김승남, 전용기, 조오섭, 이화영, 박영순, 어기규,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이인영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대형 조직이라고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 현장 대응,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TF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용자 책임 강화, 기존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 의식 등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수진 단장은 "신속한 산재 현장 대응, 다양한 산재 예방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 민주, 공수처에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장보장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특별재정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 대검 수사장보장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손준성 검사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용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공판 과정에서 수사장보

장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이 증거인멸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홍석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일 인터넷 뉴스매체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당일, 교체한 직 약 10일밖에 안 된 수사장보장정책관실 새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이 모두 삭제됐다"며 "9월7일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상욱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8일 공수처에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다가 10월 초에 휴대전화 초기화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뉴스1

다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장보장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특별재정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 대검 수사장보장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손준성 검사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용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공판 과정에서 수사장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방통행 국정 중단해야"

민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 유효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 실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당발상 책동 또한 그만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제 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

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불안, 늘어나는 가계부채, 물가 고공행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국 민생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뉴스1

"4월 전주를 재선거 무공천 방침 존중"

최형재 민주 정책위의장, 불출마 공개 선언

오는 4월 공식인 전북 전주를 재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부의장은 1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출마해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았지만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을 존중해 불출마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군가 정치인을 뽑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고 강요했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로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말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더 인내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2대 총선에 대한 준비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의장은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의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재집권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는 것이 전북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최형재 부의장은 "전주위의 비정상적인 정치가 제대로 불거져서 살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달할 것 없이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진정한 결실이 맺을 날이 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뉴스1

농협 인사추천위 운영 내실화

민주 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신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의 감감인사추천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농협 임원신사 공정화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

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자유회사나 금융자유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회시간, 지회사상 효과,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경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행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음=김대환기자